개인정보 빼내 350억 대출 알선 조직 적발

광주경찰, 저금리 속여 수수료 8억원 챙긴 10명 검거

21만여건 개인정보 불법 수집 경위 조사 등 수사 확대

"돈 때문에 걱정이시죠.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드릴게요."

은행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 맞춤형 상담으로 대출을 알선한 뒤 수억대의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이 빼낸 개인정보에는 이름·주민번호·휴대폰번호는 물론이고 근무처·대출내역·신용등급까지 포함돼 있어 피해자들을 쉽게 현혹해 대출받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불법으로 취득한 은행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을 알선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대부중개업자 박모(3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달아난 주범 김모(30)씨를 뒤쫓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9개월여동안 불법적으로 확보한 21만6000건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350억원의 캐피털 또는 대부업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8억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1건당 100원 또는 300원을 받고 은행고객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이름·주민번호·휴대전화번호·근무처·대출내역·신용등급 등 상세정보가 포함돼 있다.

이 정보를 이용해 대출을 알선한 뒤 성사되면 대부업체는 5%, 저축은행과 캐피탈은 2.5%의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이들은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 대부중개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했으며, 7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불법으로 확보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하루 평균 1500명을 대상으로 대출을 알선했다. 이들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다'고 속인 뒤 1·2금융권이 아닌 캐피탈 혹은 대부업체로 유인해 34.9%대의 고이율을 감당하게 했다. 또 1개월 이내에 원금이 상환되면 대출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장기대출을 유도하기도 했다.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동일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이들은 이번에는 발각되지 않기 위해 사무실을 수시로 옮겼으며, 텔레마케터 상담 내용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건물벽에 방음장치와 CCTV를 설치해 단속을 피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했으며,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 대출상담을 하는 것처럼 발신지역 전화번호가 '02'가 찍히도록 조작했다.

경찰은 이들이 상세한 개인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경위 등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고객정보가 유출된 은행과 금융감독원·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송기주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돼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보이스피싱·명의도용 등 2차 피해가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개인정보 유출의 출처를 철저히 수사하고 해당은행·관계기관과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

"잔금 치르고 입주까지 마쳤는데 아파트 소유권 이전 안된다니…"

화정주공 재건축 조합장 공백사태에 조합원들 불편

광주시 서구 화정주공 재건축아파트 조합원들이 잔금을 치르고 입주까지 마쳤는데도 조합장 공백 상태가 이어지며 소유권 이전이 늦어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2일 서구에 따르면 지난 3월 19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신임 조합장으로 선출된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이미자 대표에 대한 조합장 인가가 거부됐다. 서구는 정관 변경 투표와 함께 진행한 신임 조합장 선출 과정에 절차적 오류가 있었다고 불가처분 이유를 밝혔다.

변경 이전의 정관에 따르면 이 대표는 조합장 후보로 등록할 자격이 없지만, 정관이 변경될 것을 고려해 후보 등록과 조합원 투표가 이뤄진 만큼 신임 조합장 선출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전임 집행부 역시 조합장 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 시기에 진행된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조합업무에서 물러나 화정주공 재건축조합장의 공백 상태는 2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라는 이름으로 준공검사를 마친 화정주공 재건축아파트에는 잔금을 치른 조합원과 분양자가 속속 입주하고 있다. 이들은 입주지정 기간 마감 시한인 오는 5일까지 취득세 납부를 완료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지만, 이전 고시 공고가 나올 때까지 소유권 이전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준공허가와 동시에 진행되는 지방자치단체 이전 고시 공고를 내걸어야 할 조합장이 없기 때문이다. 사정은 상가도 마찬가지다.

미등기 건물에 입주한 상점은 지자체의 영업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집, 식당 등 허가제로 운영되는 업종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총 3726세대 규모인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는 현재 50%를 웃도는 입주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당시 총회는 절차상 오류가 없다. 정관 변경의 건과 임원 변경의 건은 법적으로 동시에 한 총회를 통해 가능한데도, 서구청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면서 "서구청의 월권행위(불인가처분)에 대해서는 광주시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며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폐비닐하우스 철거 대민봉사 광주 동부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이 2일 광주시 북구 용전동 일대의 폐비닐하우스를 철거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동부서 방범순찰대는 고령의 농민들이 비닐하우스 철거에 애를 먹고 있다는 소식을 들고 이날 무료 봉사활동에 나섰다. /김진수기자 jeans@

5월 3단체 "내년 기념식땐 직접 경과보고"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내년 5·18민주화운동 정부 기념식에는 단체가 직접 '5·18 경과보고'를 맡겠다고 2일 밝혔다. 5월 단체가 힘겨루기를 하느라 경과보고 발표가 정부 측에 넘어가면서 매년 5·18을 왜곡하는 내용의 경과보고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5월 24일자 6면**〉이 제기된지 10일 만이다.

5월 단체는 그러나 "시민들을 실망시킨 점은 죄송하지만, 5월 단체 가운데 누가 경과보고를 맡을 것인지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5·18은 광주시민 모두가 피해자'라는 시민들의 지적에도, 5월 3단체 누구도 경과발표 주체 하나 명확하게 매듭 짓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예상된다.

5·18의 발생과 전개과정, 의미 등 운동의 경과를 기념식 참석자들에게 밝히는 '5·18 경과보고'는 지난 1997년 기념식이 정부 주관으로 열린 이후 지난 2008년 5·18부상자회장이 잠시 맡은 것을 제외하고는 줄곧 5·18민주유공자 유족회장이 맡아왔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이후 5월 3단체가 경과보고를 누가 할 것인지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면서 발표는 광주지방보훈청장 등 정부 측 인사에게 넘어갔다. 올해 기념식 역시 광주지방보훈청이 경과 보고자로 나섰다.

올해 경과보고 역시 "광주 전역으로 (시위가) 확산함에 따라 계엄군의 진압작전이 감행됐다", "시민들과 계엄군이 밀고 밀리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부상당했고…"라는 등 5·18을 왜곡하거나 깎아내리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국회 최루탄 사건' 김선동 재심서도 의원직 상실

'국회 최루탄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잃은 김선동(49) 옛 통합진보당 의원이 재심 끝에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일 김 전 의원의 재심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며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죄질이 무거운 만큼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혐의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죄로 바뀌어 형량은 원심보다 줄었다"고 말했다. 감형에도 불구하고 의원직 상실은 회복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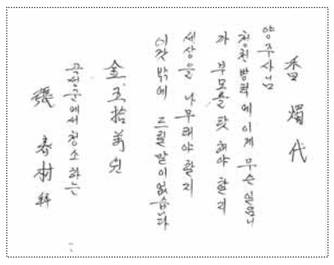
김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돼 2014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연합뉴스

'안타까운 죽음' 곡성군 공무원 애도 물결

"가족에 충실했고 직장에 성실했던 그 모습 아직도 눈에 선한데…"

추모 발길·애도 글 잇따라

"유족 돕고 싶다" 문의도



香燭代

양주사님
청천벽력에 이게 무슨 일입니
까 부모초 랐 해야 할 걸
생산은 나무라야 할지
이장 밖에 드릴 말이 없읍니다

金五拾萬원

금일 군에서 장소 와는

幾 壽村 拜

아파트에서 투신한 대학생과 부딪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곡성군청 공무원 고(故) 양대진(39·7급) 주무관에 대한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자살한 대학생의 가족도 빈소를 찾아 유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2일 곡성군에 따르면 불의의 사고로 숨진 양 주무관을 추모하는 발길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렸다가 양 주무관을 덮쳐 숨지게 한 대학생의 아버지와 형은 이날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만났다. 이들은 빈소 옆 가족 공간에서 양 주무관의 가족을 만나 "죄송합니다"라고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정례조례·직원교육 등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이틀째 빈소를 지켰다.

양 주무관이 근무했던 곡성군청에도 그를 기리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일 오전 곡성군청사 청소 담당자인 장춘재(74)씨가 양 주무관이 일했던 기획실 홍보팀을 찾아 그의 자취를 그리워했다. 업무 특성상 이른 아침에 출근하는 장씨는 보도자료 담당자로서 언론보도 기사 스크랩과 분석을 위해 오전 8시쯤이면 군청에 도착하는 양 주무관과 자주 마주쳤다. 장씨는 "유족에게 전해달라"며 홍보팀 직원들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봉투 속에는 '청천벽력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라며 안타까운 심경을 표현한 짤막한 글〈**사진**〉과 조의금이 들어있었다.

곡성경찰서 경무과에서 홍보담당으로 일하며 양 주무관과 비슷한 업무를 해온 경찰관도 홍보팀에 찾아와 조의금을 두고 갔다. 이 경찰관은 "묵묵하게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다"며 추모했다.

곡성군은 사고 소식이 전해진 지난 1일 정례조회와 2일 내부 직원교육을 취소하고 양 주무관을 애도했다.

곡성군청 홈페이지에도 애도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양 주무관의 초임지인 경기 여주시 대신면사무소에서 2010년 2월 고인을 처음 알게 됐다는 동료 공무원 김모씨는 곡성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추모 글을 남겼다. 김씨는 "직원들에게는 우애좋은 동료, 이장님과 주민들에게는 봉사하는 공무원, 항상 가족을 위해 살아가셨던 인자한 남편이자 아버지였다"며 "고향 근처인 곡성군청으로 전출이 확정되었다고 좋아하셨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적었다.

정모씨는 '한 가족에 충실했구 / 한 직장에 성실했던 / 그의 죽음 // 항상 내가 아닌 / 우리가 되기를 원했던 그 // 그의 죽음은 슬프고 슬프고 / 그 무엇으로도 표현 할 수는 없지만…'(아쉬운 이별)이라는 시로 고인을 추도했다.

양 주무관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국민들의 '유족을 돕고 싶다'는 문의 전화도 곡성군에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전관 로비 의혹' 홍만표 변호사 구속

정운호 대표 구속영장 발부

정운호(51·수감 중)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관 로비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가 2일 구속됐다.

홍 변호사를 통해 구명 로비를 시도한 정 대표의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로 청구한 홍 변호사의 영장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했다.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정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같은 사유로 발부됐다.

이에 따라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8월이 확정됐던 정 대표는 오는 5일로 예정돼 있던 석방 예정일에 출소하지 못한 채 다시 구속수사를 받는 형편이 됐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대표에게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에게 부탁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3억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방향지시등 왜 안켜!" 급제동 보복운전 40대 경찰서행

쌍나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것에 앙심을 품고 앞지르기를 한 뒤 급제동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서행.

○…2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김모(49)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8시28분께 광주시 광산구 신촌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투싼 승용차로 함모(61)씨가 운전하던 택시를 추월한 뒤 2차례에 걸쳐 급제동해 추돌 사고를 낸 혐의.

○…경찰은 "보복운전을 당해 죽을 뻔했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 블랙박스 영상을 바탕으로 추적에 나서 김씨를 붙잡았는데, 경찰에서 김씨는 "택시기사가 1차로에서 2차로로 방향을 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 사고가 날 뻔했다. 왜 택시기사는 문제삼지 않고 나만 처벌하느냐"며 되레 항의.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4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6타경 1159	1	광산구 금봉로18, 203동 1층 103호 [소촌동,소촌2차라인아파트] 59.90㎡	아파트	91,000,000 91,000,000	
2016타경 2046	1	나주시 예향로3793, 7층 716호 [이창동,나주사랑가] 48.7534㎡	아파트	125,500,000 125,500,000	
2016타경 2145	1	북구 용봉동 1150-1 용봉동대화아파트 101동 8층 802호 59.85㎡	아파트	119,000,000 119,000,000	
2016타경 2220	1	나주시 중야1길42, 207동 1층 102호 [빛가람동,빛가람엘에이치2단지아파트] 84.72㎡	아파트	222,000,000 222,000,000	
2016타경 2459	1	북구 천지인로191, 101동 11층 1109호 49.95㎡	아파트	112,000,000 112,000,000	현황조사시관리비6개월째미납상태
2016타경 60226	1	북구 양일로305번길11, 102동 10층 1010호 59.935㎡	아파트	168,000,000 168,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5타경 22838 2016타경 2985 [병합]	1	곡성군 고달면 목동리 756-3 224㎡	대	42,139,000 42,139,000	일괄매각.목록1,3 매각대상아닌건물 다수소재
		동소 756-1 388㎡	대		
		동소 757-1 332㎡	대		
		동소 768-2 63㎡	대		
		곡성군 고달면 목동1길 21-49 57.5㎡ 부속건물 아래채38㎡ 헛간,창고47.95㎡	단독주택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대지/임야/전답]					
2016타경 1845	1	영광군 법성면 월산리 3 747㎡[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답	5,976,000 5,976,000	현황임야.맹지.전기공급설비저촉
	2	동소 4 1749㎡	답	14,341,800 14,341,800	현황임야.맹지.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6타경 2329	1	곡성군 삼기면 노동리 537-1 1607㎡[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전	26,836,900 26,836,900	인접지와경계불명확
	2	동소 537-2 2179㎡[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전	31,159,700 31,159,700	인접지와경계불명확
2016타경 2718	1	영광군 백수읍 홍곡리 141-1 632㎡	전	6,888,800 6,888,8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460 1345㎡	전	2,421,000 2,421,000	현황임야.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6타경 60745	1	화순군 이양면 증리 262 1643㎡[현황전]	답	7,557,800 7,557,800	일부자연림,농지취득자격증명요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6. 6. 20. [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6. 6. 27. [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6. 6. 3.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모창환